

왜곡 판치는데... 5·18 왜곡대책위 뭐하나

법률 대응 7년간 12건 그쳐... 지난해 TF 구성 광주시 소극 대처
온라인 시민행동단 없애고 왜곡 대응 홍보물 제작·배포 중단도

댓글 공개 계기 적극 활동 나서야

광주시가 지난 2013년 구성한 뒤 7년째 운영 중인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5·18 왜곡 대책위)가 5·18 왜곡과 폄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기승을 부리던 왜곡·비방 사례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하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시민행동단도 없었고 관련 홍보 활동도 중단하는가 하면, 네이버가 댓글 이력을 전면 공개한 뒤 드러난 5·18 왜곡·폄훼 댓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3년에 꾸려진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7년간 15차례 회의를 열고 역사왜곡 법률 대응 등을 논의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왜곡대책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위원회, 역사왜곡 시정 대책위원회, 정신계승·선양 위원회 등 3개 분야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구성 당시인 2013년 5월달에 만 130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받으며 본격적인 왜곡·비방 사례에 대한 대응 활동에 나서지만 이후 법률적 한계 등에 부딪히면서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지난 7년 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특정 비방글 3건과 지만원 및 전두환씨 소송 등 법률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12건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5·18 왜곡·비방글 3건과 관련,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모욕죄 등을 제기해 이 가운데 1건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나머지 1건은 반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고 다른 1건은 기소 중지된 상태다.

중편에 출현해 5·18을 왜곡·폄훼한 탈북자·년호사 등 4명에 대한 소송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5·18 왜곡 대책위 활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날로 심해지고 있는 유튜브와 SNS에서의 폄훼·비방 활동과 비교하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형편이다.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새롭게 꾸린 5·18 역사왜곡대책위와 활동 계획이 겹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5·18 왜곡대책위의 경우 광주시가 극우세력의 악의적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기존 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내놓은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5·18 왜곡 영상은 98개로 전년도(19개)에 견줘 5배가 넘는다. 지난 2008년 17개에 불과하던 왜곡 콘텐츠 영상은 10년이 지나면서 200개까지

5·18 민주화 운동 역사왜곡 법률 대응 총 12건

법률대응 대상	기간	결과(판결)	기타
일배: 3건(5명), 형사(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중료			
중편: 출연자: 4건, 형사(명예훼손죄) 무혐의, 증거불충분(불기소결정) 중료			
지만원: 3건(민사2건, 형사1건) ※ 진행중 1건(형사1) / 중료(민사2건)			
지만원, 뉴스타운(민사)	2015.9~2018.12	8200만원 배상판결	중료
지만원(민사)	2017.6~2019.9	9500만원 배상판결	중료
지만원(형사, 명예훼손죄)	2015.8~	1심(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형소)	진행중
전두환: 2건(민사1건, 형사1건) ※ 진행중 2건			
전두환(전두환 최고록 의한 손해배상소송)			
-북한군 개입 기술 부분 삭제 없는 출판 배포 금지	2017.6~	2심(광주고등법원)	진행중
전두환(故조비호 신부 명예훼손)	2017.4~	1심(광주지방법원)	진행중
※ 중료 9건, 진행중 3건(지만원1, 전두환2)			



지만원 5·18 광수에 출연 북한특수군/광수 13.14 (영상5)

5·18 시민군을 북한군 특수군인 '광수'로 지칭하면서 5·18의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왜곡한 '지만원 TV'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확대되는 등 날로 많아지는 모양새다.

이럼에도, 왜곡대책위는 지난해 활동했던 온라인 시민행동단을 없애는 등 올해 사업계획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2개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견줘 2개 분야가 줄어든 것으로, 특히 5·18 왜곡·폄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온라인상에서 5·18 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꾸려졌던 온라인 시민행동단을 1년 만에 없앴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식 행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2월, 광주시민 50명과 전국에서 참여를 희망한 국민 43명으로 온라인 시민행동단을 만들고 '온라인 시민참여 캠페인'까지 진행하더니 1년도 못돼 중단한 것이다.

역·터미널·국립묘지 등에 진열, 배포했던 5·18 소책자 제작 사업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으로 올해는 추가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5·18 가짜뉴스가 100건 이상 접수됐지만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특별법 제정만 기다리는 형편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역사왜곡에 대한 기존 광주시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며 "광주시는 왜곡·폄훼 시도를 없애기 위해 5월 단체들과 연대, 젊은세대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5·18 진실을 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디지털 성범죄' 일당 인출책 지은 죄는 모르고 감형 호소?

3년 6개월 형량 무겁다며 항소 재판부 "사회적 피해 크다" 기각
1심 5년 구형한 검찰 항소 안해

'3년 6개월 형량은 너무 무겁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 나온 A(35)씨의 항소 이유였다.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비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의 인출책으로, 수십차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드러난 A씨 일당의 범행은 악랄하다. 우리 사회 끊이질 않았던 음란물 유포 사건, 보이스포싱 등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스마트폰 채팅앱과 몸캠피싱용 채팅앱으로 피해자 알몸 영상과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하고 유포해 갔다며 협박, 무려 65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뜯어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32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 일당에게 속아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받으며 5명의 피해자들이 건

넌 돈만 1억원이 넘는다. 몸캠 뿐 아니라 보이스포싱 범죄도 저질렀다. 피해자도 달랐다. 보이스포싱 범행에 속아 5명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만 90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인출책'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모든 피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의 인출만 담당했고 총책이 아니라는 점, 전체적 범행 과정 등을 몰라 공모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규정했다. 범행 가담의 방법·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단순한 '인출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몸캠 피싱', '보이스포싱' 범행의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가 한 번 유포되면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각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엿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타다' 유사서비스 '파파'도 기소의견 송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유사한 '파파'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파파 역시 '타다'처럼 불법 '유사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가 김보섭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개인택

시청회의 소속 기사 10여명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파파 역시 타다처럼 불법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김보섭 대표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파파 운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회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탐진강변 황금사철나무 잇단 도난에 장흥군 "형사고발 합니다"

○·장흥 탐진강변에 심어진 황금사철나무가 잇따라 사라지면서 장흥군이 나무를 훔쳐가는 주민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변에서 관목류(灌木類)인 황금사철나무 47그루가 잇따라 사라지며 14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장흥군이

참다 못해 보도자료를 내고 황금사철나무를 훔치는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형사고발 입장을 발표.

○·장흥군 관계자는 "황금사철나무의 크기가 30cm로 작다 보니 집에서 키우려는 생각이 흔해간 것으로 보인다"며 "구역별 감시활동과 함께 나무 절취를 금지하는 마을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일본노յ뎀 주이보

모기 유충 퇴치

30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 방역반원들이 중흥동의 한 다중이용시설 정화조에서 모기퇴치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추제 방역을 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이번주까지 모기 서식지인 정화조와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제주와 전남지역에 일본노이뎀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일본 노이뎀 주이보를 발령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p>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p> <p>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p> <p>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p>	<p>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p> <p>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p> <p>※ 중도상환수수료: 면제</p> <p>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p>
---	--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